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근대의 시작,
도시 개발과 종교, 문화
토론문

■ 일시: 2015.05.15

■ 장소: 전주대 지역혁신관 513호

<토론문>

「1890년대 호남 유림(湖南儒林) 및
천주교회의 동학(東學) 인식」(원재연)에 대해

강효숙 (원광대)

먼저, 지역사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불러주시어 호남 지역에 관한 지식을 더 한층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큰 주제는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과 종교, 문화” 이고, 이러한 주제 하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의 종교 혹은 사상(이데올로기 ?)으로서의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 「1890년대 호남 유림(湖南儒林) 및 천주교회의 동학(東學) 인식」이라는 발표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발표문은 1. 머리말 - 갑오개혁 전후 호남 유림의 척사위정과 동학 인식 -, 2. 교조신원운동~농민전쟁기 동학에 대한 조정의 인식(4쪽 분량), 3. 유림의 동학 인식과 척사위정(4쪽분량), 4. 천주교회의 동학 인식과 신자보호(2쪽 정도), 5. 맺음말 - 동학, 서학의 도전과 호남 유학의 근대적 변화 -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각 소주제만으로도 한 편의 논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소재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 발표자께서는 이 글을 구성하는데 상당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일단 토론자는 발표자께서 동학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는 겸손의 말씀을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과 질문으로 토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 토론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부디 이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1. 머리말 -갑오개혁 전후 호남 유림의 척사위정과 동학 인식-” 과 “3. 유림의 동학 인식과 척사위정” 은 중복되거나 내용에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면 한 곳으로 정리한다거나 부제를 달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 분량 부분에서는 발표문 제목에는 “천주교회의 동학 인식” 이라고 유림과 별도로 써져 있는데 내용은 유림부분은 4쪽이 배려되어 있는 반면 천주교회 부분은 2쪽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제목과 다소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는 발표문의 목표에 대해 머리말에서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점의 조선사회에서 발생한 당시의 지배이념인 유교(성리학)와 민중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던 동학 및 서학과의 이념적 충돌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호남 지역 유림의 위정척사 의식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밑선, 토론자)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을 전

후한 시기의 “사상사적” 관점에서 유교, 동학, 서학(천주교)의 “충돌” 을 살펴본다는 의미이고, 특히 유림의 위정척사론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교리를 알 수 있는 경전 혹은 대표적인 인물이 남긴 글이나 언행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정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유학, 동학, 천주교의 각 경전 혹은 대표적인 인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전이나 인물로 한정하여,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은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관련 자료의 일부 기술에 대한 것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조신원운동기의 상소문 1건과 유림 측 인사가 남긴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기록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유림 측 자료는 “사상사적 측면” 에서 유교와 동학, 서학을 비교해서 기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경전을 통한 교리 비교, 분석이 아닌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의 언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민군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 구례 등의 관리는 동학농민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완주 태생으로 김개남 부대에 소속되어 남원에서 활동하다 일본군이 남원에 들어선 직후 황해도로 도주하여 어린 김구와 함께 만주로 이동하였다가 황해도지역에서 김구 등과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김형진의 경우나 남원의 유태홍 등 많은 식자층이 농민군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형진의 경우 본인이 저술한 『로정양기』를 남겼으며, 유태홍의 경우 3.1운동 당시 남원을 거점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독립선언문과 獨立歌를 전달하는 중심인물로 활동한 식자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림의 동향, 특히 전라도 지역의 유림동향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머리말에서 소개된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각주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자와 자료가 기술된 시기에 대해 소개하고 각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와 발표자의 비판 등을 기술하면 발표 내용이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go.kr/index.jsp>)에서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에서는 조선정부의 對동학 인식에 대해 다루었는데, 사실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동학교도들이 주장한 것은 말 그대로 동학은 유불선을 합한 우리나라 전통적 사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東쪽에 위치한 조선에 근거한 학문으로, 교조 최제우는 사학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인정하여 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학난정의 “반도”로 낙인찍힌 동학교도들을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왕의 적자로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3년 3, 4월 보은 집회의 결과 어윤중을 통해 고종은 이를 인정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교조신원운동은 동학교도들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즈음의 조선정부의 對동학 인식은 보은집회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

니다. 또한 1894년도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발표문에서는 민인)의 對동학 인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기술했는데,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동학농민혁명 및 전쟁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정부나 일반 백성들의 對동학 인식이라고 한다면 동학경전교리와 그에 따른 동학 지도자나 교도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보다는 시기적 상황에 따른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언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의 내용도 그러한 유형의 기록물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의 부분에서 집강소시기를 1894년 6월부터 8월로 기술한 근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6월은 홍계훈과 농민군 사이에서 홍계훈이 고종에게 농민군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을 뿐이고, 집강소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7월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각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체포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정부가 청일개전을 목전에 두고 6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친일내각이 형성된 이후 점차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전봉준 등이 체포될 무렵은 이미 조선 전국에 걸쳐 일본군과 조선중앙군 및 지방군 그리고 각 지역의 민보군(수성군) 등이 철저한 농민군 탄압에 진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서울 이남에 투입된 일본군 수만 하여도 연인원 3,300여명이 넘었습니다. 즉 동학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집안은 반역집안이 되고 마는 상황 속에서 민심이 동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심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심 세력 변동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민보군이었던 경우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군이 거의 진압되는 시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거의 진압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용한 자료가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의 기록인 경우, - 당시 대원군이 일본정부에 의해 고종을 대신한 집권자가 되었지만 일본정부가 모두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즉, 당시 대원군의 對농민군 정책은 가능한 농민군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생업에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군은 가능한 이에 따르려고 한 흔적들을 많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주 19)의 황해도 지역 농민군에 대한 구분은 달리 진짜, 유사, 가짜로도 구분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농민군에 대한 구분이고,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에는 농민군을 제1파 민파, 제2파 리파, 제3파 진짜 동학파로 구분하였습니다. 이해보아 1, 2차 시기 농민군에 대한 구분의 차별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3. 유럽의 동학인식과 척사위정”에서는 먼저 구례의 황현의 오하기문에 나타나는 그의 對동학 인식을 기술하였습니다. 사실 황현의 오하기문은 동학연구자라면 기본적으로 봐야만 하는 자료임에는 틀림없고, 동학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사료인 까닭에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관련 사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비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맺음말에서 간단히 기술하였지만, 황현의 기술을 인용에 멈추지 말고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구례 이기, 남원 김재홍, 부안 김방선, 장흥 김한섭, 흥덕, 고창 지역에 대한 기록물인 취의록(저자 불명)을 통해 각 지역 유생들의 동학인식에 대해 기술하였습니 다만, 각 인물에 대한 소개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박맹수 교수님 등 몇몇 연구자의 논문이 있으므로 참고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4.천주교회의 동학인식과 신자보호”의 경우 앞서 말하였듯이 “2.”, “3.”과 비교하여 내용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까닭은 당시 한국 측 사료에서 천주교회의 관련 사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기 천주교 사료는 한문, 한글,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하여 조사, 수집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된 경위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갔던 지식인들에 의해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들어온 것이 1866년 한불조약 이후 프랑스 신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면서 원래의 종교로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원군도 천주교에 대해 나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만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한 러시아 견제 정책에서 천주교인들의 자세 등이 문제가 되어 박해가 시작되어 한동안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894년 동학 농민전쟁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은, 예를 들면 대구, 의주 지역 신부는 적극적으로 일본군 측에 서서 농민군 탄압에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뤼텔주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뫼텔주교의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정부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및 對조선정책 수립이 좌우 되었을 것이므로 뤼텔주교 보고서에 대한 분석 시도 역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뫼텔주교-프랑스정부의 상호 영향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내용은 더욱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표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뫼텔주교의 동학 전반에 걸친 보고서가 아닌 동학농민전쟁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뫼텔주교와 보고서 작성연도에 대한 소개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5.맺음말”은 앞의 내용을 동학, 서학의 도전 그리고 호남 유학의 근대적 변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발표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국민통합”, “서교도(천주교도)” 등 낯선 용어들이 나타나 앞의 내용과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그리고 “농민군 탄압을 위한 청군 원병 요청의 결과 일본군이 조선에 출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일본군이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의 편제를 완성하였고, 그 실시는 1894년 5월로하기로 결정된 것은 1893년 12월 중반이었습니다. 즉,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했든 안했든 일본군은 청국, 조선과의 개전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극우 학회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학회 조차 최근에는 청일전쟁은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기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청국에 속방을 표방하던 조선의 대외관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통적” 이라는 기술은 어떤 개념인지요? 또 대원군이 농민군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으나---원활하지 못했고” 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토론자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emo]

<토론문>

개항~대한제국기 전북 지역 천주교회와 지역사회 -갈등과 그 해소를 중심으로-

전병구 (전주대)

개항에서 대한제국 시기는, 박해 이후 천주교가 어떤 갈등과 접목 과정을 겪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논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전국적인 교안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있었고, 제주도 신축교안이나 황해도 해서교안과 같은 규모가 큰 교안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지역별 교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의 교안 연구는 발표자께서도 밝혔듯이 김진소 신부님의 ‘천주교 전주교구사’ 외에는 별도의 집중적인 연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의 전라도는 박해를 피해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으로부터 피신해온 신자들이 숨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현상이었으며, 개신교도 매우 일찍 전래되어 이런 저런 갈등의 소지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천주교의 초기 전래와 박해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 오신 발표자께서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의 전라북도 지역 교안을 연구하셨으니, 개화기 전라도 천주교의 실상을 더욱 자세히 밝히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논문에서도 벌써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교안을 찾아내셨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읽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교안(敎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안이라는 말은 중국 명(明) 말기에 ‘남경교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와 황해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당시 신문에 ‘교안’이라고 표현하였고,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교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안’이란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 측과 지역사회와의 충돌 사건에 프랑스 공사가 개입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프랑스를 법국(法國)이라 해서 이를 구한 국외교문서 법안(法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천주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을 포괄적으로 교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표자께서 각주 1)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김진소 신부님의 ‘전주교구사’에서는 천주교 측이 당한, 교안과, 천주교 측이 가해한, 교폐(敎弊)를 구분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과 목차에 ‘교안’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갈등이라고 해놓고, 본문에서는 교안이라는 용어를 시종일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말

에서는 짧게 ‘분쟁을 외교 문제로 취급하여 해결된 사안을 교안이라고 한다.’ 고 전제하였지만, 본문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교안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교안의 명확한 범주를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본 논문은 분명히 ‘교안’ 이 주제인데 제목에 교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갈등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지요?

2. 그리고 교안 뿐 아니라 모든 갈등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사상이 전래되어 수용되고 토착화하기 까지는 기존의 사상 관습과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전래 이후 1세기 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겠지만, 교안 문제는 박해 시기와는 다른 원인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도 각 교안을 사안 별로 구분하여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와 직접적인 원인을 잘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안들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발단과 대립 관계만으로는 당시 천주교의 본 모습을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천주교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교안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지역의 교안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물론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 시기에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안이 일어났지만, 전라북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꾸준히 신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등 해소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갈등 해소 노력에서 몇 가지를 밝혔지만, 그 결과를 천주교 교세의 변화와 연결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4.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2쪽에서 교안의 대립구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립 구도가 1:1이 아니고 복합적이다 보니 교안 건수가 전체 32건 보다 많은 42건이 되었고, 총 131%나 나왔습니다.

5. 갈등 해소를 위한 천주교의 노력 중, 성당을 지을 때 배려했던 몇 가지 점을 들었습니다. 전통성당은 높은 오목대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지금의 낮은 곳에 지었고, 되재나 나바위 성당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추고 이질감을 주지 않으려고 한옥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나 개신교가 집을 지을 때에는 거의가 구릉 지대에 자리를 잡았다는 지리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서양식 성당을 짓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6. 그리고 저도 겪었던 문제입니다만, 전라북도 지역이라고 했는데, 전라남도과 충청남도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라도 선교사들의 관할 지역이기는

했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상 전남 장성과 충남 진잠·진산·강경 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Memo]

일제의 식민지 도시개발과 전통도시 전주의 로컬리티 변용

원도연 (원광대)

1. 한국사나 사회사 연구에서 조선후기 특히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지방사나 도시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체사로서 국가와 민족 등의 연구에서 지역과 도시 등의 미시사 연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연구는 당연히 농촌의 해체(농민층 분해)와 근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의 지역은 곧 농촌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개항기 근대도시로 구분되는 인천, 목포, 군산 등의 도시는 근대 계획도시로서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전통도시들의 근대화를 식민도시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식민지 시기 전통도시들의 변화가 개항도시들에 비해 덜 극적이고 민족적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도시들은 식민지 시기 일정한 전환을 겪으며 근대적으로 변화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 변화의 본질과 지향성이 무엇인가, 현상적 변화를 통해서 도시는 과연 어떤 질적인 전환을 했는가 등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제기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 그것은 개항도시든 전통도시든 도시들이 겪었던 식민도시화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식민지수탈론의 관점에서 주로 해석해왔다. 정당하고 의식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사상적으로 위험하게) 결국 식민지수탈론과 근대화론의 이분법적 논리로 식민지시대를 정리하는 것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와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개항도시들이 한결같이 근대도시를 역사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재현하며 문화자원화하는 시대 흐름을 설명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 부연한다면, 식민지시기의 사회변화와 근대화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근대성에 대한 다양한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일상성, 생활사 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는 이 문제들이 곤혹스럽게 표현되곤 한다.

호남선은 착공된지 3년 10개월 만에 개통되었다. 총독부에서는 그 빠른 작업속도를 대일본제국의 또다른 능력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 철도를 놓는 것은 순전히 조선사람들에게 살기 좋고 편한 개명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일본의 은혜를 선전해댔다. ... (중략) ... 사람들은 우선 기차라는 그 해괴하게 생긴 물건을 신기한 구경거리 삼기에 바빴고, 말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빠른 그 속도에 현혹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볼 때는 분명 개명세상은 오고 있는

것이었고, 걸어서 열흘이 넘게 가야 할 길을 하루에 가버리니 일본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도 했다.

「니 군산 가면 묵고 살리지 않냐?」

사립 밖으로 따라나오며 오월이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가봐야 알제」

보름이는 고개를 저으며 스산한 웃음을 지었다. 오월이는 아직도 예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보름이의 그 쓸쓸한 얼굴이 가을 찬바람 속에 핀 들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 쥐도 군산쥐년 배가 터지게 불르고 지름기도 자르르 흘른다고 허드라. 농새 못 지목게 된 사람덜이 다급허니 찾어가는 디가 군산이고, 거그서덜 어찌어찌 묵고 살아지는갑드라...」 (〈아리랑〉 제4권 294쪽)

3.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훌륭하지만 아직 논문은 미완성이다. 특히 논문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과잉이다. 본문에 충실한다면 <식민지 시대 전통도시 전주의 사회구조 변화>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논문은 중요하고 좋다) 로컬리티의 변용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과하다. 로컬리티가 단순히 지리적 구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자료는 좀 더 풍부해져야 하고 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논문에서 전주의 변화를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후 처리와 연계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도시의 혁명성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분할지배하고 성곽을 철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식민도시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전주만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전통도시들이 공통으로 겪었던 문제들이다.

또 한 가지는 로컬리티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려면 사람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전주시민들이 일인들과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지만 심각한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전주가 의외로 기독교 등 종교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 등은 식민지도시화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도시가 근대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Memo]

[Memo]

<토론문>

일본인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에 대한 질의문

황미연 (임실고)

일제 식민지 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인 유곽에 주목한 이 논문은 유곽이 주는 피해성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달리 지역의 유곽에 대한 1차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군산지역 유곽문화에 대한 발표자의 논문은 지역문화의 한 편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아픈 역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유곽이 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의문시 되는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질의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당시 일본식 공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설립된 유곽을 큰 테두리에 놓고 글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제통감부는 경시청령 제 5호 기생단속령과 제 6호 창기단속령을 발표해 기생과 창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있다. 또 「기생, 창기에 대한 유고 조항」에 의하면 “기생은 조례관기 또는 기생이라고 부르는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창기는 상화실, 갈보, 색주가의 작부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생과 창기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기생조합과 유곽에 거주했던 기생과 창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점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일본인의 대거 거주에 따라 전북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따라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던 유곽의 설립은 크게 양산되는 모습이였다. 이에 따라 거주하는 화류계 여성의 급증은 당연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유곽에서 활동했던 화류계 여성과 달리 군산에는 군산소화권번이 주식회사로 전환, 악가무를 전승하고 전파하는 창구로 거듭났다. 이들은 요릿집에도 나아가 악가무와 함께 발표자가 직시한 몸을 판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들 또한 구분이 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발표자의 글은 전북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유곽의 변천사를 조명함으로써 암울한 시대의 근대성을 읽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타 지역의 유곽과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면 군산유곽의 특징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글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지역사 가운데 연구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군산지역 유곽에 대한 역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Memo]

[Memo]

<토론문>

정승진, 실패한 식민지 ‘개발’ 프로젝트
: 益山 黃登堤의 廢堤化 사례

이규수 (고려대)

1. ‘제국’ 과 ‘식민지’ 의 연구지형을 둘러싼 소견

○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과제는 ‘식민지수탈론’ 에 의거한 식민사학 비판이었다.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입각한 식민사학 비판은 민족주의 사학의 계승과 내재적 발전론의 정착 과정이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는 자본주의의 맹아가 근대로의 자생적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로, 일제강점기는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차별과 수탈로 자생적 이행 가능성이 압살된 민족사의 암흑기로 인식되었다. 조선후기 이래 내재적으로 성장해 온 근대화의 싹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 짓밟히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밝히는 데 집중된 일련의 노력들은 식민사학을 불식시키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일본제국주의의 부당한 지배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1960년대 이후 ‘식민지수탈론’ 은 한국사학계의 통설로 자리매김했다.

○ 사회주의 체제의 동요는 역사학의 연구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식민지근대화론’ 이 민족주의 역사학에 기초한 ‘식민지수탈론’ 을 비판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를 ‘수탈과 저항’ 의 역사가 아닌 ‘수탈과 개발’ 의 역사로 바라보자는 ‘식민지개발론’ 의 등장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경제사학계의 일부 연구자들이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을 ‘식민지수탈론’ 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역사학계는 이들의 수정사론을 ‘식민지근대화론’ 이라고 역비판하면서 ‘격투’ 가 전개되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민족주의, 탈식민주의 등을 내건 ‘탈근대주의’ 의 입장에서 ‘식민지수탈론’ 과 ‘식민지근대화론’ 양자를 모두 비판하는 ‘식민지근대성론’ 이 대두되었다. ‘근대성’ 과 ‘수탈’ 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변증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은 식민주의, 근대성, 민족주의를 서로 분리하여 고립된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인식 위에서, 일본의 억압과 착취만을 강조하는 역사서술 대신, 헤게모니 개념을 차용하여 식민지 사회를 ‘근대적 지배-종속의 관계’ 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지

배계급이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여 사회계층의 자발적 동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성’ 과 ‘문화적 헤게모니’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즉 식민지에서의 근대성은 한국인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구축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 ‘식민지근대성론’ 은 식민지 사회 주민의 정체성은 단순히 ‘민족’ 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급, 성, 지역, 신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식민지근대화론’ 과 ‘식민지근대성론’ 이 제기한 비판의 요점은 일제강점기를 ‘지배와 저항’ 의 틀로만 해석하면, 이 시기의 근대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두 견해가 ‘근대적 변화 양상’ 을 이해하는 방식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식민지근대화론’ 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변화에 대해 ‘변화의 주체’ 문제를 사상(捨象)한 채 경제적 측면에서 해방 이후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 과 연관시킨다. 반면, ‘식민지근대성론’ 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차별과 배제 논리, 규율 권력의 개인적 내면화 같은 근대성 일반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를 탈근대의 문제의식과 연관시키고 있다. 요컨대 ‘식민지근대화론’ 이나 ‘식민지근대성론’ 모두 ‘식민지수탈론’ 에 내포된 민족주의를 비판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 은 선진 근대국가의 완성을 지향하는 근대지상주의인 반면, ‘식민지근대성론’ 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근대국가로부터의 ‘벗어남(脫)’ 을 지향하는 탈근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담론은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내용상으로는 20세기의 역사 경험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주적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있었는가, 일본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어떻게 변모시켰는가, 식민지의 유산은 해방 이후 고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 근대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등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한국의 장기 근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이들 ‘식민지근대화론’ 과 ‘식민지근대성론’ 이 지닌 최대 결함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성’ 에 주목하면서 ‘식민성’ 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담론은 식민지 공간에 나타나는 근대성, 특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근대적인 규율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가 지니는 ‘식민지근대성’ 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로 근대성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치중하며, 식민성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에는 ‘탈근대주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20세기 한국의 근대는 크게 보면 식민지 경험과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식민지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으로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과 일제에 대한 ‘협력’을 재해석했다. 이들에게 식민지는 근대 세계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으며, ‘근대’의 고유하고 중요한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서구와 식민지는 동시에 발현한 근대성의 다양한 ‘굴절’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서구=보편’이나 ‘식민지=특수’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처음부터 모든 근대는 당연히 ‘식민지 근대’라고 선언했다.

○ 이들의 문제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으로 일제강점기를 재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민족’이 아닌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읽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작동한 듯하다. 역사학계에서의 일제강점기 연구가 단지 ‘민족’이라는 분석틀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급’, ‘사회’, ‘여성’, ‘신분’ 등 다양한 잣대가 이미 동원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사, 농민운동사, 여성운동사, 형평운동사, 청년운동 등 사회운동사 연구가 바로 그렇다. 다만 이들 ‘사회운동’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 식민성에 대한 불분명한 혹은 왜곡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인식은 식민지기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재조일본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마저 생긴다. 재조일본인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근거에서 지탱한 ‘침략의 선봉’이 아니라, 식민지 개발과 개화에 기여한 ‘고마운 은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이런 논의는 단적으로 말해서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식민지근대성론’이라는 여과장치 없는 시류에 편승하여 식민지 지배의 ‘공정적 역할론’ 혹은 ‘식민지시혜론’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한일관계를 조명할 때,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조선인들과 연대하여 투쟁한 일본인들이 분명 존재했고,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밝혀내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악의의 일본인’ 모습만이 아니라, ‘선의의 일본인’ 모습도 우리는 어떠한 선입견 없이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선의의 일본인’이 재조일본인 전체를 대신하여 풀뿌리 수탈과정 전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사회 내부에 ‘식민지시혜론’이라는 비정상적인 역사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의 극복과 식민지배의 비판이라는 ‘식민지수탈론’에 의거한 역사인식은 여전히 시의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수탈’ 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2. 지역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 식민지 ‘개발’ 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 일본에서 경험한 지방개발운동의 이식문제와 식민지에서의 적용문제는?
- 지역 ‘개발’ 의 이중적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은?
- 전통적 요소와 근대의 변화상을 결합하는 문제의 가능성은?

[Memo]